

News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통위, 연 1.25%에서 0.25%p 인상한 1.5%로 결정… 2020년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4번째 인상… 특히 이번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
올해 추가 금리인상 시점도 주목… 올해 2%대 넘어서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 내놓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통화긴축 속도 빨라진데 따른 것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 검토…기준금리 인상 반영

연합인포맥스

5대 시중은행, 수신금리 인상 정도와 시기 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 수신금리 올라가면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년 만에 연 2%대 바라볼 것이라는 전망
대출금리도 시차 두고 서서히 높아질 전망… 다만 지난 1월과 달리 수신금리 반영에 다소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 금융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

2월 국내은행 연체율 0.25%…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조선비즈

2월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25%로 전월말 대비 0.02%p 상승…전년동월대비 0.08%p 내려간 수준
올해 2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보다 1,000억원 증가한 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전쟁 인해 미래 예측 힘들다"

이데일리

ECB, 기준금리 0.0%와 예금금리 마이너스 0.5%로 동결…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은 4월 400억, 5월 300억, 6월 200억 유로로 줄여나갈 계획
ECB총재, "미국과 경제상황이 다르다"며 다른 길 가겠다고 공표…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을 더 걱정하는 것이 주된 이유

지난해 보험사 RBC비율 246.2%…금감원 "건전성 감독 강화할 것"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 보험사 RBC비율이 작년 12월말 기준 246.2% 기록해 9월말보다 8.3%p 하락… 생보사 254.4%, 손보사 231.4%
전체 보험사 가용자본은 161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 3,000억원 감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000억원 감소와 현금배당 예정액이 2조 2,000억원 발생 때문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보험 출시 길 열린다

IT조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출시를 미뤄왔던 보험사들이 다시 상품 출시에 서두르는 모습… 윤석열 후보 당선되며 당국 규제만으로 신상품 출시 막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금감원은 일단 관련 보험 출시는 보험사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 법원 판결에 따른 실제 피해액 5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100억원까지 보장 등

IRP 이전 의무화, 증권사 '머니무브' 화색

이코노믹리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4일부터 본격 시행…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로의 이전 의무화
IRP로의 머니무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유리한 고지 절령 중인 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혜입을 것으로 예상… 수익률도 증권사가 타 금융사보다 세…

가상자산 시장 선점하자…증권사, 앞다퉈 플랫폼 투자

아이뉴스24

키움증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MOU 체결…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기존 사업모델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STO에 높은 관심 보여…향후 기초자산성 인정받으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가능…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